

깃털처럼 가벼워진 대법원장이란 자리

태평로



최원규
논설위원

2011년 양승태 대법관은 퇴임 당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고위 법관들이 퇴임 직후 변호사로 개업해 거액의 수입료를 챙겨 비판 여론이 일 때였다. 퇴임한 그는 백담사에 머물며 보름간 설악산을 다녔고 네팔로 가서 트레킹을 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법원장 후보 인사 검증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미국에서 존 뮤어 트레일을 걷다가 이 대통령의 설득으로 대법원장이 됐다. 당시 그 초연함이 화제가 됐다.

그는 대법원장이 된 후에도 “전관에 우가 범조 병폐로 지적되는 것은 슬픈 현실”이라고 했다. 해결책 중 하나로 평생법관제를 제시했다. 대법관에 못 오른 법원장들이 하급심에 복귀해 재판하면서 65세 정년을 채울 수 있게 한 것이다. 그의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일이다. 그랬던 그가 얼마 전 변호사 등록을 하고 대법원에 올라온 기업 형사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간 전직 대법원장들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거나 로펌에 들어가도 사건 수임 대신 자문·고문 역할만 했다. 대법원장이란 자리의 무게, 그리고 사건 수임이 법관

들에게 줄 부담 등을 의식했을 것이다. 그런데 전직 대법원장이 하급심 사건도 아니고 대법원 사건을 수임했다. 그 자체로 부적절한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도 이를 모를 리 없다. 어느 법조인은 그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퇴임 후 7년간 아무런 활동을 못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6년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큰 고통을 겪었고, 재판 진행 중에 폐암 수술도 받았다. 올 초 1실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변호사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결국 ‘생

대법 사건 수임한 양승태 전 원장 ‘사법 흑역사’ 만든 김명수 전 원장 대법원장의 명예와 무게 점점 추락 존경받는 대법원장 없는 건 불행’을 위해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은 그만의 문제도 아니다. 대개 50대 후반에 임명되는 우리 대법관들은 임기가 종신제인 미국과 달리 임기 6년을 마치면 60대 초반 정도 나이에서 변호사 개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정년이 70세인 대법원장도 다를 게 없다. 10여 년 전 ‘청백리’로 불렸던 어느 대법관은 퇴임 후 아내가 운영하던 판 의점에서 일하다 “무항산이면 무항심(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이라는 말과 함께 대

형 로펌으로 갔다. 그 직후 대법원 사건 수임 상위권을 기록했다고 한다. 퇴임 후 후학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해놓고 로펌으로 직행한 대법관도 있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전관예우 의혹을 계속 부추긴다는 것이다. 한때 전직 대법관들이 대법원 사건을 독점하면서 ‘도장 값’으로만 수천만 원씩 받아 간다는 말이 돌았다. 실제 어느 변형 회장이 제임 시 대법원 사건 수임을 조사해 봤더니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선임된 대법원 사건의 70~80%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와중에 전직 대법원장까지 대법원 사건 수임으로 대법원장 자리의 명예와 무게를 또 낮췄다. 대법원장 자리가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건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민의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 역사에선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 외에 그런 대법원장이 없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권 편에서 법원을 정치판처럼 만들고 거짓말까지 했다. 사법의 흑역사다. 그런 데 재판·법원 행적에서 출중했다는 평을 들어온 양 전 대법원장까지 대법원 사건 수임으로 대법원장 자리의 명예와 무게를 또 낮췄다. 대법원장 자리가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건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김준의 맛과 섬 [205]

강릉 참가자미 물회



명태가 떠난 동해는 이제 어떤 생물이 주인 노릇을 할까. 오징어도 뜨거워진 바닷물에 제 살길을 찾아 북으로 올라가고, 서해로도 발길을 돌렸다. 주문진 어시장을 기웃거리며 오징어를 찾다가 참가자미를 만났다. 늦여름에 가지미라고 늦더위가 마냥 좋아 칠 늦은 피서를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류는 반갑지 않다. 주문진 등대에서 만난 이장은 표층 수온이 30도가 넘는다며, 낚시에 걸려 올라오던 물고기도 익어버릴 날씨가려 이젠 끝났단다. 하지만 가지미는 강릉 앞 동해를 지키고 있다. 게다가 물회부터 구이, 조림과 밥식해까지 어떻게 내놓아도 환영이다. 굵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고 있었는가. 명태와 오징어에 밀린 자리를 이제 가지미에게 나눠야 하지 않을까.

가자미는 기름가지미, 참가지미, 홍가지미 등이다. 이들은 넙치, 도다리, 서대와 함께 가지미목에 속한다. 물 깊은 곳에서 좋은 가지미가 잡힌다. 강릉이 꼭 그런 곳이다. 가지미는 자루 모양 그물로 끌어서 잡는 ‘외끌이기선 저인망’과 조류에 따라 이동하는 그물을 전 날 미리 놓아 잡는 ‘연안자망’ 어법으로 잡는다. 저인망은 바닥에 붙어 있는 가지미를 잡는다면, 자망은 먹이 활동을 할 때 잡는다. 자망은 부부나 가족 노동에 의지한다면, 저인망은 외국인을 포함해 여러 명의 선원을 고용해 조업한다. 자망은 새벽에 그물을 걷어오지만, 저인망은 며칠씩 조업을 한다. 어느 쪽이든 가지미잡이는 오랜 경험과 느낌에 의지한다. 수십 길은 바닥에 머물기에 어군 탐지기로 가지미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지미가 여전히 동해

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태풍 끝에 뜨거운 바람이 남쪽에서 올라왔지만 ‘배신하지 않는다’는 임주가 있으니 이 날씨도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 금년 늦더위와 고별식이라도 할 요량으로 가지미 물회를 주문했다. 주인은 참가자미라고 강조한다. 살이 단단하고 도톰해 횡감으로 좋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어떤 음식으로 조리해도 좋은 것이 가지미다. 새벽 바다에 다녀온 부부가 선창에서 그물에 걸린 가지미를 떼어낸다. 옆에서는 위판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요란하다. 당 일라라라 더 좋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정부는 ‘의사 증원’ 원칙 지키되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길

국민의힘이 ‘의료 파동’을 풀기 위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현재 의대 1학년 3000명 정도가 유급될 가능성이 높는데 올해 뽑는 2025학년도 신입생 4600여 명을 합하면 한 학년이 7500명이 넘는 상황이 된다. 국민의힘은 내년엔 원래 수준인 3000여 명이 넘는 의대 부담을 줄이자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이 넘으면서 이제는 수도권 응급실도 진료 제한이 일상이 됐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수준으로 갈 것이다. ‘응급실부터 응급 상황’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간호사 직종을 주축으로 한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제안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교육책임 것이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사 증원 백지화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전공의

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 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행정처분 철회 등에 이어 정부가 물러서기만 하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책이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당면한 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원하고 있다. 정부가 무작정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공의·의대생들의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와 같다. 인구 고령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다.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의사도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의사들은 한꺼번에 2000명은 너무 지나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충분한 타협의 여지가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의힘 제안을 계기로 삼아 일단 대화를 시작하고 점차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갔으면 한다.

병장과 하사 월급 역전되면 군대가 유지되겠나

내년 병장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내년 병장 월급을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전역 때 자산 형성 지원금 55만원까지 합치면 월 205만원이 된다. 이는 내년 하사 1호봉 기본급(193만원)보다 높고, 각종 수당을 합한 실급여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군 내부에선 ‘병장과 하사 월급이 역전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크다고 한다. 올해 하사 월급은 각종 수당을 합쳐 252만원이지만, 각종 공제와 뺀 실수령액은 200만원대 초반이다.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하사 3호봉의 7월 급여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수당’에서 세공과 건강·연금보험료 등을 뺀 액수는 203만여 원이었다. 영외 거주 간부는 영내 제공 식사비까지 매달 20만원가량 따로 내야 한다. 반면 일반 병사는 세금이 없어 월급과 실수령액이 같다. 국방부는 내년 하사 월급이 273만원으로 올라 병장과 하사의 월급 역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선 초급 간부들은 “하사 월급은 3% 인상에 그친 반면 병장 월급은 24%나 급등해 사실상 차이가 없어졌다”고 말한다. 초급 간부는 일반 공무원 월급 인상률에 묶였는데 병장 월급은 4년 만에 3.3배가 됐으니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박봉에 시달리는 데다 주거, 근무, 자녀 교육 여건도 열악하다. 혜택은 적고 책임만 많다. 이 때문에 초급 간부의 군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 경력 5년 이상 장교·부사관 9500명이 지난해 군을 떠났다. 전년보다 24% 늘어난 역대 최대였다. 2015년 4.8대1이던 학군장교(ROTC) 지원율은 작년 1.8대1로 떨어졌다. 전국 대학 학군단 108곳 중 81곳이 정원을 못 채웠다. 1호 학군단인 서울대는 장교 임관자가 5명뿐이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지원율도 매년 떨어지고 자퇴생은 3년 새 2배로 늘었다. 부사관 선발 인원도 4년 새 25% 감소해 육군은 정원의 절반도 못 채웠다. 의무 복무 기간은 긴데 월급 차이는 없으니 누가 초급 간부를 하러 하겠나. 초급 간부는 군의 중추이자 핵심이다. 전쟁의 승패는 소대장·중대장·부사관의 자질이 가른다. 이들이 사기가 꺾이거나 군을 떠나면 병사가 아무리 많아도 오히려 좋지 않다. 최첨단 스텔스기나 이지스함도 무용지물이다. 병사 월급 200만원대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숫자에 집착할 일은 아니다. 이젠 초급 간부들 처우를 개선하고 자질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지금 못 잡으면 불길처럼 번질 것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에서 여학생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교사, 여군도 있고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지난 25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엔 전국 초·중·고교 400여 곳의 이름이 담겨 있어 충격을 줬다. 그중 실제로 피해를 입은 학교 사례들이 속속 확인되면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은 보안 수준이 높아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쉬운 텔레그램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 수사가 어렵다 보니 일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신고가 시작되고 교육부가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일부 텔레그램 방은 문을 닫았지만 일부는 새로운 방을 만들어가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새로 개설된 한 텔레그램 방 관리자는 “뉴스에 나와도 쫓지 말고 지능(지인 능숙)해라”라고 했다고 한다. 익명성을 무기로 디지털 공간을 성범죄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딥페이크 영상 범죄를 저지르는 10

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올 7월까지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가 131명(73.6%)에 달했다. 2021년 51명이었는데 벌써 배 이상 늘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범죄의 저연령화로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 10대들은 소셜 미디어 사용과 사진 공유가 일상이다 보니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도 잘 못한다고 한다. 학교 당국의 교육,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이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지금 이런 범죄를 막지 못하면 불길처럼 번져 사회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유포하는 것은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 못지않게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다. 피해자는 인격적 살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허점투성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제작해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드물고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는 처벌 대상도 아니다.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친일파 공직 진출 금지법》 만든다고?

이재명당 "친일파 아직도 있다" ... 미쳤다, 《식민지 조선 망령(亡靈)》에 씌였다

21세기 자유민주 대한민국엔 《친일파》 없다 | 조선 왕이 나라 헌납할 때는 있었다
없는 《친일파》 조직하는 《친일 물이》 구거리 | 《세습 우력》 괴담, 《독도 괴담》 꾸며내는 무당들

이재명당의 《친일 물이》 시리즈

이재명의 민주당 사람들은 말했다. “윤석열 정권의 매국 행위를 죄사하지 않겠다. 《친일파 공직 진출 금지법》을 추진하겠다.”

그러나 이재명은 또 지하철 역사(驛舍)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을 걸고 나왔다.

[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이은 《친일 물이》 시리즈다.

친일파? 그런 게 지금도 있나? 없다. 이 모든 소동은 그림, 원가?

★ 《북중리》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펼치는 수작이다.
★ 대한민국을 [미·일·식민지]로 격하하는 것이다.
★ 자유·우파와 그 정부를 [악마화] 하려는 음모다.

궁지에 몰린 이재명의 역공이라 할지.

BTS 시대에도 《죽창가》 불러

[서양 오랑캐]와 [왜적(倭賊)]을 적대하는 대외인식은 조선 말기에 나왔다.

조선 성리학자들은 서구 열강의 침범 때 이렇게 상소했다. “서양 도적과 화친하지는 것은, 적국 쪽 사람의 말입니다. 후자(後都)를 따르면, 금수(金船)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동학 농민전쟁》 때도 [척양(洋)]·[왜적(倭)] 외침이 나왔다. 서학(西學), 양요(洋謠), 일본군의 농민군 학살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걸 드라마화한 SBS 《녹두꽃》은 《남민전》 사건의 김남주(노래)를 배경에 깔았다.

《죽창가》다.

“이 두메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 / 이 고을은 반란이 되자 하네 / 가슴에 꽃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김남주 아니라도, 당시 일본군 만행은 한 맺힐 것이었다.

글수까지 반일 이승만도 《친일파》로 왜곡

문제는, ※ 일본이 자유민주 국가로 바뀌고, ※ 서방 동맹의 일원이 된 후에도, 그리고 ※ 대한민국이 산업화·선진국이 된 후에도, NI 좌파는 그 해독은 [한국 식민지론]을 계속 우려먹고 산다는 사실이다.

◆ 1980년대의 소설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1945~1950년대 빨치산 현상을 이렇게 풀이한다. “나라에서는 농지개혁 한다고 말대포만 평평 췄됐지, 공산당 안힐 사람 워디 있었는가요 나라가 공산당 맹글고, 저주들이 빨갱이 맹당개요!”

◆ 2020/03/21자 《노동신문》이 전한 [김일성 교시]는 이랬다. “우리는 일제와 자주 농들에게 반란 착취와 압박을 잊지 말고 계급적 원수들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 - KCNA Watch (2024/08/21)

조선 당쟁(사화) 단골메뉴는 《역모》 이재명당 정쟁(탄핵) 주제곡은 《친일물이》

2024년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똑같다.

newdaily.co.kr 뉴데일리